

# 經濟危機의 歷史的 比較

## — 韓國經濟에의 示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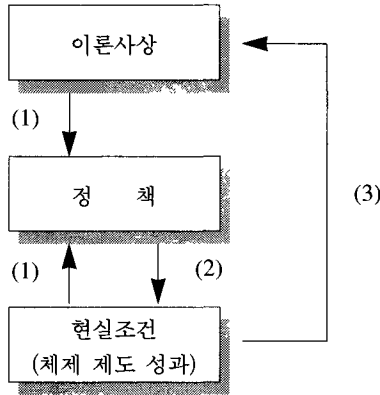
朴 濟 勳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위기가 이들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호기가 되어 재도약의 발판으로 작용할지 또는 세계대공황의 전조가 될런지는 여러 요인의 작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현실적 변수는 미국경제의 앞날이다. 미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미국내에서는 아직은 낙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등에서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의 교훈은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 무오류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때 비판론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극단적 비판론은 무대책을 낳을 수 있다. 미국경제의 최근의 경쟁력 회복은 80년대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구조조정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여러 이론·사상에 입각한 다양한 시각과 견해에 귀기울이면서 모든 경우에 대비하는 냉정한 현실인식 하에 세계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의 현실·조건을 고려한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의 정립 노력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사실이다.

### 1. 序 論

IMF체제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그 어느 때 보다 경제학계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과 처방 등에 관한 백가제방식의 논의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시작된 것은 다행이다. 오늘날의 위기가 경제학자들만의 책임도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것이 경제학자들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학계가 이미 그 위험을 경고하였음에도 귀기울이지 않았다고 하여 경제관료나 재벌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간 경제학계가 과거에 비해 질·양면에서 발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 경제수준을 선도할 정도까지는 못된 것도 사실이다. 경제학도 응용학문인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현실적 대안제시라는 그간의 우리의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얼마나 부응하였는가를 우리 모두 자문해 보아야 할 때이다.

외환위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의 특감 발표의 요지는 정부 관료 그 중에서도 재경원 고위 관료들의 독단 등의 ‘人災’가 피할 수 있었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림 1> 政策 動學

위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경제학의 역할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다음장에서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여러 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작금의 경제위기는 기존의 경제학의 패러다임으로는 충분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의 도출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 경제분석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각의 확보를 위해서는 과거 동양에서 하던 방식, 즉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방식(溫故以知新)이 유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 3장에서는 비교역사론적 시각에서 1920년대말의 경제대공황과 19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구사회주의권의 體制轉換(system transformation)의 경우를 최근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위기와 비교하여 검토해 본다. 여기서 주된 비교점은 위기의 원인과 그를 설명하고 정책수립에 영향을 준 이론·사상, 위기극복정책 그리고 정책의 성과와 위기극복의 의미 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政策 動學(policy dynamics) 모델을 기초로 한다. 동 모델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이다. 이론·사상 및 현실·조건이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영향을 주며 정책은 현실·조건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된 현실·조건에 나타난 정책성과는 다시 이론·사상 및 정책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과정이 진행된다(<그림 1>). 끝으로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최근의 위기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망과 이상의 논의가 우리경제의 위기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危機의 原因

### 2.1. 主體

국내에서 금변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얘기할 때 논점이 되는 것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감사원이나 검찰의 조사에서는 대체로 재경원 등 정부관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같다. 기아사태해결의 지연이나 IMF 구제금융 지원신청 지연, 정확한 외환 보유고 집계 체제 미수립, 방만한 종금사 허가 같은 금융감독상의 문제 등 최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관리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크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이번 위기의 핵심이 민간단기외채의 급증과 환율 급상승에 따른 국가부도사태에 있었다고 할 때 재정적자나 공공채무가 문제가 된 중남미나 중·동구의 경우와는 구별해야 한다. 즉별경영체제하에서 문어발식 확장과 무리한 중복투자를 한 재벌과 상호지급보증과 판치금융에 의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하지 않은 즉 道德的 解弛(moral hazard)에 빠진 금융권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1997년초의 한보부도사태에서부터 다시 드러났듯이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정치권의 부패·무능력을 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선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아사태를 정치논리에 의해 방치하고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 등이 위기의 직접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듯이 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 위기의 책임은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관리, 재벌과 정치권 등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대내적으로 볼 때 정치인의 리더쉽 不在(leadership failure), 관료의 政策誤謬(policy failure), 재벌기업의 經營不實(management failure)과 이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과 학계 등의 知識人의 墮落(intellectual failure)이 함께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 왔으며 결국 한국경제의 體制失敗(sysetm failure)를 초래하였다는 설명이 가능하다.<sup>(1)</sup>

### 2.2. 性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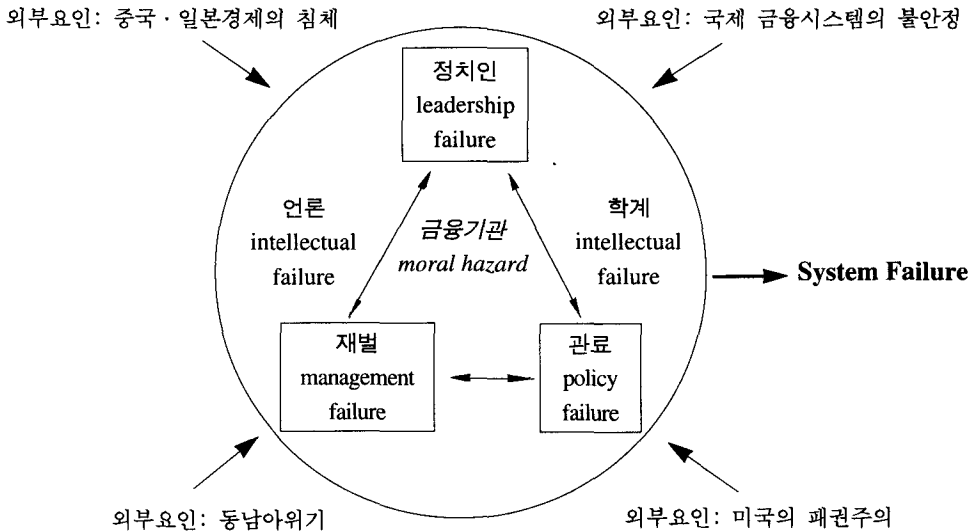
외환위기가 본격화되고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 직전까지 정부에서는 우리경제의 實物部門의 基礎(fundamentals)가 건전하다는 주장을 해 왔다. 현재도 위기의 원인을 신용등급저하에 따른 단기외채상환불능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많다. 반면에 우리나라뿐만 아

(1) 외환위기의 원인요인별 구체적 관련기관을 지적한 것으로는 이성섭(1998) 참조.

나라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을 실물부문 기초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oubini(1998)는 “예를 들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1997년초까지는 멕시코가 보였던 모든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10년 동안 GDP의 10%에 가까운)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 실질환율상승, 자산버블, 잘못된 프로젝트에의 과도투자, 취약한 은행시스템.” 등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증상은 우리의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는 이어 “원인에 대한 잘못된 認識(misconception)은 위기가 모두 비합리적인 투기와 傳染(contagion)에 기인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시아지역의 취약한 基礎與件(fundamentals)이 위기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성장율과 물가상승율 등 국내경제의 전통적 지표상으로는 실물기반이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외환보유고나 총외채추계 등 통계상의 문제점 외에도 이번 위기가 가져다 준 교훈의 하나는 전통적 국내경제지표 그 자체는 금융자유화 수준이 높은 단계에서는 한 경제의 평가를 위한 더 이상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금번의 위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주기적으로 늘상 있어 왔던 일이며 특히 외환 및 금융 자유화의 초기 단계에 있는 나라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다만 이번의 경우는 대내외적 요인이 겹쳐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을 뿐이라는 것이 주류 국제금융전공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科學的 접근론자들의 논리이다. 한편 금번 한국경제의 위기를 우리나라에 한정된 현상으로 보는 시각과 아시아 경제에 공통된 현상 즉 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의 한계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양시각 공히 구조조정 특히 금융부문의 개혁이 완결되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함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 및 아시아 경제위기가 단기적 현상이든 장기적이고 구조적 문제이든 현대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내재적 모순의 발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자들과 케인지안들은 보다 비관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 2.3. 根源

지구촌 시대에서 어떤 경제도 대외적 요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196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 성장을 추구해 오면서 OECD 가입 후 금융자유화의 속도를 가속화해 온 경제는 더욱 그러하다. 이번 경제위기도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되는 바이다. 즉 傳染說(contagion theory)로서 경제의 취약성이 한국을 외부의 경제위기라는 전염병에 쉽게 노출시켰다는 논리이다. 대외적 요인을 강조하는 견해 중에는 일종의 “陰謀說(conspiracy theory)” 같은 것으로서 금융자본을 내세운 미국 패권주의의 발로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찬근(1998)].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그림 2〉 韓國經濟 危機의 原因

등 신흥공업국에 이어 일본의 직접투자로 인해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동남아국가가 엔블록으로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홍콩의 반환 등으로 정치·경제적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미리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지역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국제화와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도 급속히 변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닐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면에서 대내적 요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무(경제)는 뿌리(내부요인)만 튼튼하다면 심한 바람(외부요인)에도 견딜 수 있지만 허약한 뿌리로는 웬만한 바람에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3. 歷史的 比較

현재의 경제위기를 역사적 유사사건과 비교할 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금세기 1920년대말 발생한 경제대공황이고 다른 하나는 1980년대말부터 시작된 구소련·동구 지역의 사회주의 경제의 체제전환이다. 전자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있던 자본주의의 위기로서 이론적으로는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적 총수요관리에 의한 정부개입과 정책적으로는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에 의해 극복됨으로써 소위 “修正資本主義”로서 자본주의의 부활을 가능케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1970년대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체제경쟁을 비교적 대등하게 수행을 해 온 구소련 등의 사회주의경제가 1980년대 들어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세계화·정보화의 새로운 조류에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하면서 급격히 체제경쟁에서 뒤떨어진 결과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20세기 들어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국의 정권을 장악한 이래 적어도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또는 패배로 성격 규정을 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금번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성격과 의미를 역사적 맥락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유사성을 분석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정책동학모형을 기초로 구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을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소위 ‘體制轉換比較模形’ [박제훈(1994)]을 수정하여 각각의 경우에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를 이론·사상, 정책, 성과·의의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분석한 후 이론·사상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건의 원인과 성격 규정, 정책의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주제, 속도, 순서, 방향으로 나누어 보다 자세한 분석을 시도한다.

### 3.1. 1930年代 大恐慌

#### 3.1.1. 理論·思想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원인과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경제사학계에서 이미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sup>(2)</sup>

공황의 원인에 관해서는 크게 有效需要說과 通貨說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전자는 유효 수요의 부족에 따른 생산설비과잉 때문에 일어났다는 전통적 해석으로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첫번째로 지적되는 것이 보호무역주의와 농산물수출국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미국 농업제품수출의 급격한 감소이다. 두번째는 로자루셈부르크, 레닌 등의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는 ‘過少消費說’이다. 자본의 이윤추구논리에 의해 자본가계급 또는 부유층의 소비성향이 낮아 소비지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요인이라는 논리이다. 다음으로는 토지투기시장 및 주식시장의 붕괴로 인한 실질부의 감소로 소비지출이 줄어들었다는 주장과 1920년대에 붐을 이루었던 주택과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의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유효수요 증가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전통적인 유효수요설의 내용에 대해 프리드만 등 화폐론자들이 반론을 제

(2) 이하의 내용은 주로 양동휴(1994), 제9장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기하면서 나온 것이 통화설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공황과 당국의 부적절한 통화정책이 대공황을 심화시킨 주요인이 된다. “우선 농업부문의 파폐이든 자본시장의 붕괴이든 그것에 의해 1930년의 은행공황이 야기되었고 은행의 연쇄적인 도산은 민간이 현금을 선호하게끔 충격을 줌과 동시에 은행 자체의 자금관리방식을 위협회피적, 안전우선주의적으로 바꾸게 하여 은행의 신용창조기능을 크게 저하시켰다. 이럴 때일수록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위원회는 본원통화를 늘려 통화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통화당국은 국제수지균형과 외환관리에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국내총수요관리에는 소홀하여 이자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通貨緊縮을 지속함으로써 미국의 공황을 심화시켰다는 논리이다. 통화설에 대한 반박은 소위 테민논쟁에 잘 집약되어 있다. 테민(P. Temin) 및 그 추종자들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통화설대로라면 통화공급의 감소로 이자율이 상승하여야 하는데 이자율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또한 명목통화량은 감소하였지만 물가 하락으로 실질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건설투자 등 투자수요의 감소나 해외부문에서의 수출수요 감소보다는 국내소비수요의 감소가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전통적 유효수요설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주식시장붕괴에 따른 부의 감소, 은행도산에 따른 소비지출감소, 1차산품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부진 등은 이러한 소비수요감소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매우 불만족스러운 결론을 맺고 있다. 테민논쟁은 대공황의 원인과 진행을 근본적으로 미국내의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시각에서 출발하였으나 논쟁이 진행되면서 세계적인 요인들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테민 본인도 “대공황의 역사적 연원이 1차대전이며 또한 대전 이후 각국이 금본위제의 틀 안에서 긴축정책을 실시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이 1933년, 프랑스가 1936년, 독일이 2차 대전시까지 금본위를 고수한 것이 경직적 정책 실패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유효수요설과 통화설의 절충론을 주장하는 시각은 1930년대의 공황을 1차대전과 1920년대에 걸친 경제의 構造的 변화와 연결짓는다. “미국에 있어서의 내구재생산 팽창과 노동시장의 경직화, 국제통화제도의 취약화, 국제결제방식이 점차 미국의 대부에 의존하게 된 점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긴축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치명적이었다”는 것이다.

### 3.1.2. 政策-뉴딜政策<sup>(3)</sup>

1929년의 주식시장의 붕괴 이후 당시 후버 대통령이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더라면 그것이 경제대공황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으리라는 시각이 많다. 후버 대통령은 그 해

(3) 이하의 내용은 Galbraith(1994)와 이구한(1993) 참조.

11월 중순에 기업 및 노동계 지도자들을 백악관에 모아 놓고 “임금은 내리지 말고 노동자들을 더 이상 해고하지 말 것,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구호를 제공해 줄 것,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지 말 것” 등의 구태의연한 권유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와 기업의 강력함에 대한 확신을 잃는 것은 어리석다”고 대중에게 공언하는 등 매우 안이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 수준을 보여 주었다. 1930년 여름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확산되면서 후버는 6월 관세장벽을 높이는 내용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서명함으로써 보호주의 경쟁에 뛰어 들었다. 1931년 봄 오스트리아의 은행파산이 독일과 영국으로 파급되자 영국의 영란은행은 금지불을 이행하지 못하고 마침내 금본위제를 포기하게 된다. 후버는 1932년 1월에 ‘再建金融公社(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를 설립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 주정부의 구호계획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후버의 경제위기 대응책은 그의 전통적 미국식 개인주의에 대한 집착 즉 정부는 가능한 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연방정부의 구호계획에 반대했고 결국 193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국민을 위한 새로운 政策(New Deal)’을 약속한 뉴욕 주지사인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민주당 후보에게 패하게 된다.

선거 직후인 1932년 후반기의 경제상황은 최악이었다. 전체노동력의 1/4 이상이 일자리를 갖지 못했고 직장폐쇄는 계속 늘어 갔으며 은행도산이 계속되었다. 결국 38개 주들은 1933년 3월초 은행의 휴업을 선언하게 된다. 3월 4일 루즈벨트가 취임할 당시에 주식거래에 대한 통제, 보다 효율적인 정부경제계획수립 등 몇 가지 시책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정강이나 마스터플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나의 굳은 신념은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그의 취임연설에서 보듯이 뉴딜에는 구체적 철학보다는 용기있는 信念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날인 1933년 3월 5일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국 은행 휴업을 선포하고 3월 9일에는 의회소집을 요구하였다. 3월 15일에 반 이상의 은행들이 다시 정상업무를 시작했다. 3월 12일 루스벨트는 라디오 ‘노변담화’에서 “이제 금융제도는 안정되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확인하였다. 3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의 ‘100日’은 의회의 특별회기로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와 열띤 입법이 계속된 기간이었다.

#### 1) 100日 政策

의회가 제일 먼저 행한 조치는 1933년 3월에 民間資源保存團(Civilian Conservation Corps)을 창설하여 30여만 명에 달하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들을 전국의 산림지방으로 파견한 것이었다. 이들 청년들은 1,500여 개에 달하는 수용소에서 캠프 생활을 하고



식목, 홍수예방, 토양의 산화방지 등을 위한 작업을 하면서 일당 1달러 정도의 돈을 받았다. 이 사업은 점차 참가 인원이 증가하여 1941년에는 200만이 넘었다. 추가 실업 대책으로 의회는 5월에 聯邦緊急救護法(The Federal Emergency Relief Act)을 제정하여 주정부와 시정부에 대해 5억 달러의 직접 재정지원을 제공토록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뉴딜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법이 이 기간에 제정된 사실이다. 國家産業復興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NIRA), 農業調停法(Agricultural Adjustment Act: AAA), 테네시溪谷 開發工事(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창설에 관한 법이 그것이다.

- 國家産業復興法(NIRA)

동법에 따라 뉴딜정책 중 가장 야심적인 정부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國家復興廳(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이 창설되었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 당시의 戰時産業理事會를 모델로 한 것으로서 정부 감독하에 산업을 자율적으로 규제하여 경제를 소생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각 산업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산, 가격, 임금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공정경쟁규약이 만들어졌다. 국가부흥청은 협동의 상징으로 '푸른 독수리(Blue Eagle)'를 마크로 내세워 그것을 공장이나 가게, 상표에 붙이게 하였다. 그 결과 약 200만의 고용주들이 국가부흥청이 설정한 근로기준을 받아들였다. 국가부흥청은 '푸른 독수리'가 경제회복을 가져 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새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그러나 경제회복의 속도가 약속보다 더디자 국민들은 실망하였다. 또한 국가부흥청이 50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산업들을 모두 규제하려 하였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소기업들은 동 사업계획이 대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비난하였고 노동자들은 동 계획이 물가에 비해 임금만 떨어지도록 만들어졌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NIRA의 최대 문제점은 기존 경제논리와 상충성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경제는 총수요감소로 기업은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가격인하는 임금 삭감과 해고를 불가피하게 했으며 이것이 다시 총수요부족을 악화시키면서 불황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NIRA의 핵심은 각 산업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인하를 자제하고 따라서 임금삭감과 해고를 자제하는 産業規約(industry code)을 체결하는 것이다. 동시에 노동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권한을 부여하는 일대 양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자유경쟁이라는 전통적 경제이론과의 상충을 해결해야 했다. 특히 反獨占法과의 상충이 제일 치명적

이었으며 결국 1935년 5월 대법원의 판결로 NIRA는 종결되었다. 이것은 독일과 일본의 산업카르텔을 전후의 경제체제의 중요한 요소로 허용한 것에 비해 대조되는 사항으로 미국식 경제체제형성의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IRA의 업적으로는 그 규약들이 소년노동과 노동착취 같은 극악한 노동조건을 제거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점과 산업 생산의 축소 추세에 제동을 건 효과를 들 수 있다.

• 農業調停法(AAA)

당시 농업 문제의 핵심은 만성적인 過剩生産과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이었다. 이것은 생산자는 완전경쟁하에서 생산을 하는 반면 구매자는 수가 많지 않아 불완전경쟁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데에 기인한다. 결국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였다. 농업조정법은 단순한 농산물의 생산제한을 넘어서 既生産된 잉여농산물의 파피를 결정하였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지원하에 1933년 1,000만 에이커의 땅에서 면화를 뽑아버리고 600만 마리의 돼지를 죽여 식료품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다.

1933년초부터 시작되었으며 '미국기후 역사상 최악' 이라고까지 불렀던 가뭄도 농업생산 감소에 큰 몫을 하여 농산물 가격은 인상되었고 농민소득은 늘어나 뉴딜의 농업정책은 성과를 거둔게 된다. 이것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크지 않아 NIRA의 경우보다 반대가 적었던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세금부과권의 남용과 국가의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법안 무효 판결이 나면서 가격보장과 생산조정에 관한 대체법안이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테네시溪谷 開發工事(TVA)

1933년 5월 루스벨트 대통령은 테네시溪谷 開發工事(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창설법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TVA는 독립된 공사로서 테네시 강과 지류에 댐과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와 비료를 생산하고 테네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캔터키주 등 7개주에 대한 홍수관리시설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정부가 전기를 생산함은 물론 그것을 소비자에게 파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요금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측정할 기준치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TVA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국식 體制에 소비에트적 觀念을 接合시키려는 시도' 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변덕스럽고 파괴적인 강의 개발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후진적인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려는 매우 대담한 시도' 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 2) 通貨 · 金融政策

당시 통화정책은 정통적인 면과 비정통적인 면이 모두 있었다. 우선 정통적인 정책으로서 경기부양을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저금리정책을 취했으며 민간은행에 대한 풍부한 대부자금의 공급을 위해 공채매입의 공개시장정책을 썼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차입자는 많지 않았고 은행의 剩餘準備金(excess reserves)만 쌓여 갔다. 결과적으로 뉴딜의 통화정책은 실패하였다.

뉴딜의 비정통적인 통화정책은 1933년 루스벨트의 金買入프로그램(gold-buying program)이다. 이것은 물가수준 특히 농산물가격과 금가격이 正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주목하여(즉 인플레이션 시기에 금가격이 상승하는 사실) 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금가격을 상승시키려는 발상이었다. 이에 1933년 10월 모든 민간 보유 금을 정부 특히 復興金融公社(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에 팔도록 하고 매일 금 가격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달러는 외환시장에서 평가절하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증대효과는 있었으나 영국과 프랑스도 유사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했으며 1933년 연말에 물가는 여전히 하락을 계속했다. 1934년 2월 1일 금 가격이 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되면서 금매입정책은 끝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금 매입정책이 없었다면 국내 물가 특히 수출 농산물 가격은 더 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정설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재무부 관리나 경제학자 대부분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 3) 雇傭 및 社會保障 政策

뉴딜의 직접적 실업대책은 Public Works Administration(PWA)와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WPA)라는 두 기관에 의한 고용창출정책으로 대표된다. PWA는 사무실빌딩이나 교량, 기타 공공건축물을 짓는 것을 담당했으며 WPA는 이들 사업들이 창출한 일자리를 가능한 한 증대하는 것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財政均衡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시의 정통적 경제이론 및 사상과는 양립하기 어려웠다. 재정적자나 차입은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웠고 균형예산하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있어야 하나 이것은 디플레이션효과만 낼 뿐이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깬 것이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였다. 1933년 12월 31일자 뉴욕 타임즈지에 실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그는 “정부차입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2년 후 『一般理論』(*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이 출간되면서 경제학계를 통해 일반국민이나 정부 당국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Galbraith(1994, ch. 10)].

대공황은 미국으로 하여금 유럽국가들이 이미 실행중이었던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된다. 1935년 8월 14일 루스벨트는 ‘社會保障法’에 서명하였다. 거기에는 ‘老人年金’과 ‘失業補償’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대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노인연금 및 실업보상, 맹인·불구자들을 위한 구호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권을 부여하였다. 루스벨트는 동 법에 서명하면서 “인생행로 중 위험과 불안정이 발생한 시기에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완벽한 보호수단을 제공할 수 없다. …… 이 법은 개인의 필요에 부응할 것은 물론 경제에 있어 안정화 역할을 할 것이다. …… 사회보장은 수립은 되고 있지만 결코 완성되지 않은 어떤 구조물의 한 주춧돌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사회보장정책의 의의와 성격을 규정하였다. 사회보장법은 대상자의 소득 증대를 통해 총수요를 진작함으로써 대공황 극복의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수혜 대상 가운데 많은 종류의 직종 특히 농업 노동자와 가내수공업 노동자들이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려 함으로써 경기부양효과를 감소시켰다.

### 3.1.3. 成果-意義

뉴딜이 대공황을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1936년에 회복되던 경제는 1938년에 다시 악화되어 실업자가 전체 노동력의 1/5인 1천만 명에 이르렀다. 실업문제는 2차대전으로 인한 軍需特需가 일어남으로써 비로소 해결된다. 그러나 뉴딜은 전통적 자유주의 국가로 하여금 정부의 간섭을 사상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인정하게끔 만들었으며 사회보장과 노조의 역할을 인정하게 했다.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은 사실상 이미 과거에 계속 제기되어 온 것들이었으나 대공황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통해 국민들의 변화 욕구를 배경으로 일시에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뉴딜은 경제학계에 있어 정부의 불간섭이라는 금기를 깨면서 불황타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총수요관리정책을 제시하는 케인지안 또는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낳게 하였다. 이것은 소위 수정자본주의시대의 도래를 가져오게 한 계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Galbraith(1994, ch. 10)). 그러나 케인즈의 사상도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대공황에는 뿌리 깊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경제침체는 본질적으로 신호 혼선의 문제에 불과하며 이는 돈을 약간 더 많이 찍어냄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는 케인즈의 주장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주장인 것이다”(Krugman(1994b, p. 52)). 또한 마르크스주의자 등 좌파 역시 “경기순환이 제도상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해결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라는 (케인즈의) 견해에 저으기 실망하였다.” 그러나 케인즈에 대해 가장 큰 적개심을 보인 것은 크루그만에 따르면 보수주의

자들(그들 자신은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이었다. 그들은 케인즈의 사상보다도 심미가라든가, 동성연애자라든가 하는 식으로 그의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실제적인 면에서는 케인즈가 정부 역할의 확대를 정당화한 점이 그들의 공격 대상이었다.

### 3.2. 移行期 러시아經濟의 體制轉換<sup>(4)</sup>

#### 3.2.1. 理論·思想

##### 1) 經濟思想의 轉換<sup>(5)</sup>

1990년 2월에 야블린스키(Grigoriy Yavlinsky)를 주축으로 마련된 ‘400日 프로그램’은 소련 최초로 시장경제로의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이행이 경제개혁과 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소련을 400일안에 시장경제로 이행시키는 것으로 신속성, 매각을 통한 대규모의 사유화, 단계적인 가격 자율화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 경제팀들은 “점진적인 개혁을 위한 시기는 이미 놓쳤다. 부분적인 경제개혁은 헝가리나, 유고슬라비아의 경험에서 보듯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고, 폴란드의 ‘衝擊療法(shock therapy)’에 큰 영향을 받았다.

1990년 여름, 야블린스키의 400일 프로그램을 보완·수정하기 위해 고르바초프와 엘친의 동의하에, 고르바초프의 수석 경제자문위원인 샬탈린을 주축으로 하는 젊은 경제팀이 구성되었다. 1990년 8월말, 샬탈린팀은 ‘市場經濟로의 移行’이라는 이름의 그 유명한 ‘500日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러시아에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사유화에 대한 희망이 널리 퍼져 있을 무렵, 고르바초프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 경제 프로그램의 철회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반면, 엘친은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고르바초프 등 연방 지도자들은 1990년 사유화 정책을 포기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1990년 6월의 주권선언을 통해 러시아 공화국내의 주권을 소련의 지배로부터 장악하고, 소련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던 완전한 사기업을 1990년 12월의 ‘財産法’(Law on Property) 제정을 근거로 허용하였다. 이 법과 함께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법은 1990년 12월 25일에 제정된 ‘企業과 企業活動에 關한 法’(The Law on Enterprise and Entrepreneurial Activity)으로 사기업에 분명한 경영권을 부여하고 온갖 규제를 철폐하였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등록만 하면 금지된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사유화를 어떻게 실행하는가였다. 러시아 최초의 사유화법은

(4) 이하는 Aslund(1995, ch. 2-3)를 참조한 것이다.

(5) 이하는 Aslund(1995, pp. 36-40) 참조.

1990년 11월에 선포된 ‘土地改革法’ (the Law on Land Reform)으로 초기에는 토지개혁에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토지개혁이라는 후속조치를 실행시키지 못하였는데, 그 후 주요 사유화법은 1991년 7월에 러시아 최고회의에 의해 채택되고 러시아의 사유화라는 맥락에서 토의되었다. 구소련 붕괴 후 보다 광범위한 사유화 필요성이 소련시아에 확산되었지만, 집단농장의 관리자들이 보수적인 블록을 형성해 토지개혁에 반대하는가 하면, 심각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사유화 실행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었다.

## 2) 소聯邦 解體의 原因<sup>(6)</sup>

1991년 12월 26일 고르바초프의 사임과 최고회의 해체로 공식화된 소련방의 해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가지고 있는 체제의 기본모순이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기존체제 내에서 개혁을 시도한 페레스트로이카의 실패, 1991년 8월의 보수쿠데타의 실패와 그에 따른 소련 공산당의 몰락 및 소련방 유지에 관건을 쥔 우크라이나의 독립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體制失敗 (system-failure)

사회주의경제가 붕괴하였을 당시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시스템 그 자체에 있었다. 이 경제체제의 두드러진 특징이자 문제점 중 첫 번째는 레닌주의적 政治優先主義 (primacy of politics over economics)이고, 두 번째 특징은 효율성이나, 이윤, 미래가치보다는 양적인 생산량을 그 경제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자원의 낭비와 생산의 효율성 저하는 필연적이 된다. 이 경제모델의 세 번째 특징으로 가격은 종속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가격의 결정이나 수급은 수요나 세계시장가격 혹은 실제생산비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나 행정적인 이유로 정해진다.

### • 페레스트로이카의 失敗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해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는 당초에는 기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내에서의 개혁을 통한 경제회복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70년 이상 기득권을 누려온 공산당 및 관료들의 반발로 인한 경제개혁의 부진에 따라 신사고와 글라스노스트에 의한 정치·외교 및 사회 등 비경제부문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혁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결과 동서독의 통일을 가능케 한 냉전의 종식을

(6) 이하는 박제훈(1992, 1장) 및 Aslund(1995, pp. 41-52) 참조.

비롯 소련내에서의 자유화, 민주화 등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당초 기대했던 경제 개혁에는 실패하여 소련 경제는 페레스트로이카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경제개혁의 실패는 경제부문의 개혁에 비해 정치·사회부문의 개혁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혁의 추진에 긴요한 안정된 정치세력의 구축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70년 이상 구축되어 온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의 반발을 누르고 과학기술경쟁에서 미국·일본 등 서구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정보 등 각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다만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한 개혁주도세력이 개혁의 완전한 청사진 특히 경제부문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위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욕구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 페레스트로이카 실패의 중요 요인의 하나라 할 것이다.

고르바초프에게 있어서 개혁은 목표 그 자체라기보다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었다. 그의 목표는 경제침체와 미국과의 군비경쟁으로 위협받고 있던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소연방을 강화하고 재생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노력의 근거는 소련 공산주의도 개혁 가능하다는 그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결국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고르바초프의 실수는 무엇이었던가? 고르바초프의 첫 번째 최대 실수는 정치적·경제적으로 회생하기 힘든 공산주의를 포기하기를 거부한 것과 별다른 대안 없이 구체제를 파괴한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두 번째 큰 실수는 심각했던 민족문제를 간과한 점이다. 민족의 독립요구가 잇달아 발생하자 고르바초프는 이를 독립의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脫中央(Decentralization) 요구라 간주하여 어떤 이권이나 특권을 제시하여 무마하려고 시도하였고 결국 실패하고 만다. 1990년의 아제르바이잔 사태와 1991년 리투아니아 사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민족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강제퇴임 및 소연방해체가 임박한 시점까지도 여전히 민족문제를 새로운 연방결성을 위한 과정이라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 말경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루지아, 아르메니아의 5개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였고, 1991년 8월의 쿠데타 실패를 고비로 결국 1991년 12월 소연방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동유럽의 위성 공화국 해체, 언론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허용, 마르크스-레닌주의 타파, 전체주의 공산체제 파괴, 민주화 시도 등 고르바초프의 평화건설에 대한 업적은 높이 평가되지만, 경제개혁의 실패와 연방해체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科學技術革命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체제의 실패가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마르크스적 용어를 빌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생산력은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수준에 의해 규정된다고 볼 때 197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소위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에 의해 규정된 새로운 생산력 단계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라는 생산관계가 더 이상 효율적인 작동이 어렵게 된 것이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1970년대 중반 이후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때부터 두 체제간의 경쟁은 이미 사실상 서방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와 구소련의 성장률은 사실상 정체상태로 들어 선 반면 서방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1980년에 출간되었던 것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이 정보화라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보화는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창의적인 企業家精神(entrepreneurship),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보유통의 자유화를 기반으로 한다.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한 기업과 산업의 巨大化(gigantomania)와 의사결정의 집중 및 정보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것이 정보화이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라는 후진적 생산양식이 그 질곡으로 작용한 생산력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예언과는 달리 20세기 중반은 사회주의라는 생산양식이 정보화라는 새로운 생산력의 질곡이 되는 역사의 변증법을 보여 주게 된다.

3.2.2. 政策-體制轉換政策

1) 러시아 初期 經濟改革政策<sup>(7)</sup>

엘친의 1991년 10월 28일 러시아 인민대표회의에서 제안된 프로그램이 러시아 급진 경제개혁의 시초가 된다. 가이다르팀에 의해 작성된 이 프로그램은 巨視經濟 安定化, 價格自由化, 私有化, 社會保障 강화 및 獨占 解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기 안정화정책은 ① 비효율적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② 국방 및 행정에 대한 지출 감소 ③ 구소연방 안정기금 및 대외지원을 위한 러시아공화국의 충당금 중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격자유화는 1991년말까지 실시키로 계획되었으며 사유화도 ① 3개월내에 만개 또는 중소기업의 50% 정도가 사유화되고 ② 1991년 11월에 국유재산이 러시아의 각급 정부간에 분할되며 ③ 2-3주내에 주택사유화 기본원칙이 결정되는 것으로 되었다.

(7) 이하는 박제훈(1993a, II장) 참조.



1991년 11월 6일 옐친은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과 함께 가이다르를 경제 정책문제 담당 부총리로 임명했다. 11월 15일 5개의 대통령 포고령과 5개의 정부결정을 발표하면서 대외무역자유화와 임금의 국가통제 철폐, 소연방 재무부의 러시아로의 이관 등의 조치를 취했다.

1992년 1월 2일의 가격자유화 조치로 러시아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1월 동안에 소비자 가격이 250%, 그 중 식품가격이 296%, 비식품가격이 150%, 서비스요금이 130% 인상되었다. 당시 제1부총리인 부르불리스(Gennadiy Burbulis)는 사유화와 독점해체가 선행하지 않는 가격자유화는 국민생활을 황폐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야블린스키도 개혁은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이다르는 일찍부터 경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재정적자의 축소와 긴축통화·금융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2년 2월 27일 가이다르와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마투힌이 공동으로 서명한 “러시아 聯邦 經濟政策에 관한 메모랜덤”은 러시아의 개혁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개혁프로그램을 정리하여 IMF에 제출한 것이다.

메모랜덤은 가격자유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어느 곳에서든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교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사유화의 가속화를 약속했다. 1992년 1/4분기 재정적자는 GDP의 10%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나 상업은행에 대한 중앙은행 대출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자율도 1991년 2.9%에서 20%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지불준비율도 1992년 4월까지 20%로 증가시켰다. 에너지 가격은 1993년말까지 점진적으로 국제수준으로의 조정이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4월 20일 국내 에너지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되 연동되도록 하기 위해 輸出稅(export duties) 제도를 도입했다. 메모랜덤은 강제적인 국가주문제도의 폐지를 규정하고 1992년말까지 남아있는 중앙공급시스템을 폐지키로 하였다. 러시아는 1992년 4월 20일 단일환율제로 이행하였다. 경상거래에는 변동환율, 자본거래에는 고정환율로 이행하였다[Noren(1992, pp. 3-41)].

## 2) 가이다르 프로그램의 問題點과 急進路線의 後退

개혁 기획의 非一致性과 無決斷이 가이다르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서 지적되었다. 개혁과 안에서도 가브릴 포포프 같은 학자는 사유화와 가격자유화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독점기업은 공급증대보다는 가격만 인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이다르는 아발킨, 리슈코프, 샤탈린, 야블린스키 등이 각각 제안한 프로그램에서 공통된 소위 “計劃的” 접근방식을 비판하고, 계획의 최적과정에 대한 끝없는 논쟁을 종식시키고 모든 방면에서 정책을

실제 실행해 나갔다. 그는 거시경제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와 국민으로부터의 압력을 저지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듯 했다. 5월까지 부분적인 성과가 있어 인플레이션율의 둔화와 루블가치의 안정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6월 들어 슈메이코, 히자 및 체르노뮌르딘 등 중도보수파의 인물들이 내각에 들어오면서 가이다르의 급진노선은 사실상 수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먼저 당초 예정되었던 에너지 가격자유화가 1993년 여름으로 연기되면서 6월 21일에는 국영기업 구제자금으로 5,000억 루블의 방출이 결정되어 긴축 재정·금융정책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러한 온건노선으로의 전환은 러시아 정부가 7월초에 최고회의에 제출한 “中期 經濟改革 強化 프로그램”에 반영되었다. 7월 17일 의회 보수파의 지지를 받은 게라센코의 중앙은행 총재로의 임명으로 가이다르의 급진개혁 노선은 여기서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급진개혁노선은 1992년 12월 10일 제7차 인민대표회의가 가이다르 총리서에 대한 인준안을 부결하고, 12월 14일 체르노뮌르딘이 새로이 총리에 임명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일단락되었다. 그 이후 1993년 여름까지 러시아의 경제개혁은 정부내에서의 표도로프 등의 개혁파와 체르노뮌르딘 등의 중도보수파 사이의 노선갈등과 함께 계속 첨예화되는 의회와 정부간의 권력투쟁인 헌법투쟁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게 된다. 1993년 9월에 가이다르가 보수성향의 로보프대신에 제1부총리에 다시 임명됨으로써 러시아 경제개혁의 “가이다르 2期”가 열리면서 급진경제개혁이 꺾기는 하나 새롭게 추진되기 시작한다.

### 3.2.3. 成果-意義<sup>(8)</sup>

#### 1) 成果

##### • 少壯 經濟팀의 構成

엘친은 개혁을 위해 구소련의 나이든 관료, 학자들보다는 젊고 유능한 경제학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방의 경제학을 공부한 가이다르와 일련의 신진 학자들로 그의 개혁 정부를 구성했다.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이다르 및 측근들이 모든 면에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우수했고 개혁안에 있어서도 가장 급진적이고도 포괄적이었다. 엘친은 러시아를 위해서는 폴란드에서 행해진 것과 같은 충격요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 • 改革意志

정치적인 면에서와 달리 경제적인 면에서 엘친의 개혁의지는 확고했다. 경제적 자유와

(8) 이하는 Aslund(1995, ch. 3) 및 박제훈(1993a, pp. 18-22) 참조.

거시경제적 안정이 엘친의 중점 목표였지만 충격요법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행해진 각 조치들로 볼 때 개혁은 포괄적, 동시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漸進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은 다른 공화국들과의 연계 없이 러시아 독자적으로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독자 통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균형 예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정화 정책은 특히 군수분야에 대한 지출 삭감, 보조금 삭감과 세수확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화부문의 화폐적인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진 면이 있다. 환율 및 루블화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부족이었고, 이에 서방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다.

### 1) 問題點

#### • 프로그램의 模糊性

대체로 엘친의 경제개혁 구상은 모호하고 양립불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자유화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 가격자유화에는 물자부족, 전반적인 러시아 경제의 독점화 현상 등 큰 장애요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몇몇 조치들이 취해지기는 했지만 특히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자유무역은 등한시되었다.

주택, 소기업, 그리고 일부 대기업의 사유화가 시작되었지만 별로 성과가 좋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토지사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GDP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생활수준의 하락과 함께 범죄, 부패가 만연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개혁 프로그램은 폴란드나 체코에 비해 포괄적이지 못했다(물론 개혁 초기에 이 두 국가는 국제 기구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 • 既得權層의 反撥

개혁팀은 인민주의자(populist), 맑시스트, 그리고 여타 다수의 이익집단 — 주로 공업 및 농업 부문의 국영기업 관리들 — 등 개혁으로부터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집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의 비판은 서로 일치하는 면이 있었는데 우선 이들은 러시아의 경제위기가 그리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대안이 있다고 주장하고 엘친 정부의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재정불균형과 만성적 물자부족의 심각성을 간과하면서 인플레이션보다는 생산과 투자의 감소가 문제라고 생각했고 가격보다는 생산을 안정시키고 싶어했다. 따라서 보조금, 세율인하 등을 통한 적자재정, 통화팽창을 주장하면서 나아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및 기업간 채무와 같은 구체제의 관성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政治 制度的 問題點

초기부터 러시아의 개혁은 많은 정치적, 제도적 문제점에 직면했다. 舊국가기관의 규모는 엄청났으며 이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개혁의 적대세력이 형성되었다. 정부기관들을 제대로 제어하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도 새로 제정되어야 했다. 특히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구분이 모호한 점이 초기 밀월기간이 끝나면서 문제가 되었다. 엘친 자신은 단호해 보이지만 항상 개혁팀에 협조적이지만은 않았고, 개혁의 요건들에 대한 그의 이해부족도 상당한 걸림돌이었다. 개혁장관들은 엘친으로부터뿐만이 아니라 정치 전반으로부터도 분리, 고립되어 있었다. 즉 이들은 엘친에 의해 독자적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의회, 기업, 노조, 지역 대표자, 정당들과 충분히 협조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은 배타적인 엘리트주의자로 인식되었고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가질 수 없었다. 더욱이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도 없었고, 행정부조차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관료들은 구체제의 행동방식을 답습하면서 개혁 실시에 관한 중앙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로써 의회는 이들의 독자적인 개혁추구에 대해 더욱 적대적이게 되었다.

제도적인 문제는 정치적 문제보다 더욱 복잡하고 심각했다. 비록 상당수가 철폐 또는 통합되었지만 國家計劃委員會(Gosplan), 國家價格委員會 등 舊시절의 국가기관들이 이름만 바꾼 형태로 잔존하여 반대 세력의 중심이 되었고, 지방뿐 아니라 중앙에도 적대적인 과거의 무능한 관료들이 상당수 남아 있었다. 구소련 시절에는 법보다 공산당의 명령이 우선했고 관료들은 무조건 당의 명령에 따라야 했지만 공산당이 해체된 이후에도 관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법질서를 무시하고 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사익을 추구하는 계기로 이용함으로써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엘친 자신도 구세력 출신이었던 만큼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이러한 러시아 관료주의의 문제점은 사실 소련시절 말기부터 계속된 것으로 구체제를 개혁하려는 고르바초프의 시도가 실패한 큰 원인 중 하나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

### 3) 意義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시장경제에 관한 교과서적인 경제이론, 그 중에서도 시장질서의 효율성을 확신하는 소위 新自由主義의인 경제사상의 실험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러시아의 초기 급진개혁은 1년도 안되어 실패하나 그것이 漸進主義의 승리를 곧 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타 중·동구의 이행기 경제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그리고 세보르스키(Przeworski(1991))가 개혁의 정치동학에서 이론적으로 지적하였듯이 개혁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경우에는 급진개혁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권이든 집권 초기에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초기에 급진개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쉬운 개혁부터 추진하여 개혁의 동조 세력을 형성하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체제전환과 같이 혁명적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는 지지세력의 형성보다 반대세력의 결집을 막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대체로 전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있게 들린다. 현재 이행기 경제는 초기의 혼란 단계를 거치면서 대체로 正常國家(normal state)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아직도 체제전환과 이행의 理論化(theorizing) 과정은 진행중이나 이들의 경험이 경제사상에 끼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급진개혁이 러시아의 경우는 실패하고 다른 이행기 경제의 경우에도 많은 부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시에 사적 재산권의 보호와 시장질서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사상이 큰 영향을 주었으며 나름대로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주의 붕괴로 인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배경으로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사상의 만연은 필연적으로 실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過剩現狀(overshooting)을 낳았다. 그 결과 체제전환 및 각국의 대내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남미 등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적용한 정책을 그대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특히 IMF의 구소련 공화국들에 적용한 루블권 유지책은 대표적 실패 사례이다.<sup>(9)</sup>

### 3.3. 아시아 經濟危機

#### 3.3.1. 理論 · 思想

##### 1) 原因과 性格

##### • 政策失敗

크루그만(Krugman(1998))은 아시아 경제위기를 설명하는 데 기존의 外換危機模型(coventional currency-crisis model)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면에서 아시아 경제위기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모델 중 재정적자가 원인이라는 소위 '1세대 危機 模型'(first-generation crisis model)은 아시아의 경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시아 각국의 재정상태는 대체로 양호했으며 무책임한 통화팽창도 없었고 인플레이션율도 낮았다는 것이다. 둘째, 1996년에 성장율이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대체

(9) IMF는 구소련 붕괴 이후 개별 공화국의 중앙은행은 독립시키면서 단일 루블 통화권을 유지토록 권고함으로써 러시아의 통화정책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다. 자세한 것은 박제훈(1993b)을 참조 바람.

로 이들 국가들은 실업률이 높지 않았다. 따라서 1992년의 유럽의 ERM위기에서와 같이 팽창적 통화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고정환율제를 포기할 인센티브는 없었다고 할 수 있어 고정환율제를 방어하기 위한 동기가 외환위기의 원인이라는 소위 '2세대 外換危機模型'(second-generation crisis model)도 적용되기 어렵다. 셋째로 이들 국가에서는 외환위기에 앞서 자산시장에서의 호황이 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가 폭락했다. 끝으로 이들 나라에서 금융기관이 위기의 핵심 역할을 했다. 태국의 경우는 소위 '金融會社'(finance companies)들이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여 투기적 투자자들에게 대출해 주었으며 한국의 경우는 일반 시중은행이 더 많이 관련되어 차입한 단기자금을 기업의 투기적 사업에 투자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아시아의 현위기는 不實金融(financial excess)에 의한 금융위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 크루그만의 주장이다. 따라서 외환위기는 실물 부문에서의 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상이라는 논리이다. 여기서 그는 道德的 解弛(moral hazard)와 資産거품(asset bubble)이 아시아 경제위기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한다. 즉 금융기관은 정부의 암묵적 보장하에 제대로 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행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투기성 대출은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했고 이것은 다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이게 했다. 그러나 일단 거품이 꺼지면서 역의 운동이 시작된다. 자산가격의 폭락은 금융기관의 財務狀態의 不良性(insolvency)를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였으며 이것은 차입의 중단과 자산가격의 폭락을 가속시킨 것이다.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로우비니(Nouriel Roubini)도 도덕적 해이를 강조한다(이하 Roubini(1998) 참조).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도국에서의 국제수지위기는 은행위기와 연결된 '쌍둥이 위기'라는 것이다. 은행위기는 1) 금융자유화에 수반된 관리·감독의 소홀과 2) 정부의 거의 무제한적인 보장약속으로부터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다차입과 과다대출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본다. 동시에 아시아 위기는 외환위기이기도 하다. 1997년까지 아시아의 대부분의 통화는 과대평가되어 있었고 고정환율제와 단기자본유입의 과잉은 심각한 實質平價切上(appreciation)을 가져 왔다. 통화 가치의 과대평가와 도덕적 해이에 의한 과잉투자로 경상수지 적자는 매우 컸다. 도덕적 해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우선 은행의 자본금규모가 작아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크지 않다. 상당수 은행은 공공 소유거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은행 예금주들도 예금보장 약속을 받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을 모니터할 동기가 없다. 끝으로 은행 자신이 정부로부터 默示的인 保障(government bail-out)을 받

는다.

로우비니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중 상당수가 예를 들면 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의 경우 경제의 基礎指數(fundamentals)에서 1997년초에 과거 멕시코와 같은 증상을 이미 나타냈다. GDP 10%에 가까운 경상수지적자, 실질 평가절상, 자산거품, 잘못된 프로젝트에의 과잉투자, 취약한 은행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그는 멕시코나 아시아 모두 비합리적인 투기나 비합리적인 傳染(contagion)보다는 취약한 經濟基礎(fundamental)가 경제위기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한다.

• 아시아 文化論

그동안 아시아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것이 유교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價値(Asian Value)라고 하여 그의 긍정적 역할이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분석은 후쿠야마(F. Fukuyama, 1997)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그의 논지의 핵심은 “경험적으로 볼 때 전세계적으로 경제 近代化와 民主主義 안정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아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 앞에 놓여진 문제는 왜 유독 아시아만이 세계적 추세의 예외가 되는가란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란 말에 집약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아시아의 예외성’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논리가 있다. 첫째는 문화적 논리이고 둘째는 정치적 논리이다. 문화적 논리의 핵심은 아시아 사회에는 서구의 ‘個人’ 개념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싱가포르의 리관유 전 총리에 의해 대표된다. 그는 유교사상이 특정 형태의 정치적 권위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쿠야마는 “일상 삶 속의 유교사상은 다양한 유형의 정치권력 및 권위와 공존하였다. …… 실제로 캐나다, 영국, 미국 사회내에서 화교를 비롯한 동양인은 서구 현대민주주의 속에서 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의 가치가 서구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적대적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저해하는 보다 중요한 요소는 정치적인 요인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까운 정치모델의 ‘展示效果’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구소련 몰락 이후 전개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지나친 개인주의와, 자기방종, 가족해체가 야기한 사회적 병폐가 드러나는 1990년대 미국사회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양과 아시아의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중요한 분석틀로 제시한 후쿠야마(Fukuyama(1995))의 견해는 “동아시아 3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기업조직의 유교질서 수용과 배태 및 제도화가 어떻게 일본에서는 ‘높은’ 신뢰를 형성하고 한국과 대만에서는

‘낮은’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유석춘(1997, p. 140)). 아시아의 유교자본주의의 한계를 경제적 측면에서 일찍이 비판한 것은 크루그만[Krugman(1994a)]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아시아의 고도성장이 양적 투입의 확대에 의존한 외연적 성장이었기 때문에 질적 측면의 중요성이 커지는 21세기에는 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적 경제발전의 독자성을 유교에서 찾는 움직임은 아직도 활발하다. 함재봉(1997)은 유교에서의 국가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유교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서구의 복지국가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서구복지국가가 계급간의 이해관계를 국가기제를 통하여 절충하는 과정에서 태동된 것인 데 반하여 유교국가는 가족과 같이 구성원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유교에서는 ‘國家’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란 ‘家’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인 생존은 물론 윤리와 도덕이 융성하는 사회의 건설과 이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국가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資本主義 大恐慌論

이번의 아시아 경제위기를 경제발전 단계에서 구조적인 요인이나 또는 정책적 오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단순히 몇 나라에 한정된 사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에서 비롯된 세계 대공황의 전조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의 무정부성에 의해 공황이 불가피하며 결국 사회주의로 대체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는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정치경제학에서 자본주의의 불황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 과소소비설이다. 동說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불황상태는 산업순환의 한 국면이거나 일시적인 특수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경제가 다른 상쇄요인이 없는 한 당연히 향해 가는 상태이다. 둘째, 이렇게 불황으로 향해 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경제가 소비재에 대한 부족을 끊임 없이 야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Bleaney(1976): 김수행(1998)에서 재인용).” 즉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그것의 생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소비재의 수요를 확대하는 비자본주의적 시장, 전쟁, 자본수출, 사회복지 등의 외부요인이 존재해야만 불황탈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소소비설의 대표적 이론가인 로자록셈부르크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최초의 경제형태이며 생존조건으로서 기타의 경제형태들을 필요로 한다. …… 자본주의의 축적운동은 그 모순을 해결함과 동시에 더욱 악화시킨다. 일정한 발전단계에 도달하면 사회



주의적 적용원리 이외에는 어떤 탈출구도 없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Luxemburg(1913)].

정치경제학의 자본주의에 대한 극단적으로 비판적인 시각과는 달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기변동이라는 특성이 금융자본의 국제화로 인해 그 불안정이 증폭된 데서 아시아의 위기를 설명하려는 케인지안적 시각이 있다. 여기서는 현재의 위기는 전후에 진전된 무역에서의 세계화 추세와 1970년대 이후 변동환율제의 도입에 따른 국제금융자본의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중요성 확대,<sup>(10)</sup> 냉전 후 미국에 의한 일극체제 형성에 따라 견제세력의 부재라는 새로운 여건 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새로운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적절한 정부개입에 의해 그 모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 앞의 좌파적 시각과 구별된다.<sup>(11)</sup>

### 3.3.2. 政策-IMF의 政策勸告

#### 1) IMF 批判論

작금의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IMF 처방의 문제점을 앞장서 제기한 학자들 중의 대표적인 사람이 미 하버드대 펠드스타인(Feldstein(1998))이다. 그는 우선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접근방식을 주장한다. IMF는 과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성공에 고무되어 아시아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재정과 금융긴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구조개혁까지 이행조건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라틴아메리카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 우선 한국이 위기에 봉착한 원인을 원화의 고평가와 경상수지적자에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들어서도 연평균 8%의 성장과 5% 미만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해 왔다. 물론 1995년 GDP의 1.7%였던 경상수지적자가 1996년에 4.7%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위기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외환보유고보다 훨씬 많은 단기자금을 빌려 쓴 데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총외채 규모보다 외채 구조가 문제이다. 총외채는 GDP의 30%에 불과하지만 단기채무가 1,200억 달러에 달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몰린 것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남미와는 다른 정책이 한국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즉 정부지출삭감과 세율인상, 초긴축 금융 대신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채권

(10) 독점자본의 최고형태로서의 금융자본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금융자본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논증한 것으로는 김수행·김진엽 역(1994)을 참조.

(11) 마르크스와 케인즈의 공통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것은 Robinson(1950)이다. 그녀에 따르면 실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과 자본주의는 그 안에 몰락의 씨를 가지고 있다고 본 점이 공통점이다.

은행들이 지불기한을 연장해 주고 지급이자에 상당하는 신규유자를 제공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율이 5%에 머물고 있는 나라에 대해 초긴축정책을 요구함으로써 은행대출금리를 연 30%로 올려 놓은 것도 잘못이다. 특히 한국의 은행들에 대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강요함으로써 신용수축을 유발한 것이 문제이다. IMF 구조개혁안 중 상당부분은 한국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들이다. 또한 무역장벽의 철폐나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과 같이 일본과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해온 시장개방정책과 大同小異한 것들도 있다. 구조개혁안의 대부분은 한국정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두어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이행조건의 무리한 강요는 결국 IMF의 신뢰성만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하바드대의 제프리 삭스 교수도 IMF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Sachs(1997)). 거액의 예산적자를 내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신용공여로 이를 보전하고 있는 무분별한 정부(중남미)를 다루는 데에는 IMF가 익숙하다. 그러나 해외채권자들이 갑자기 용자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벌어지는 민간부문의 위기를 다루는 데는 익숙지 못하다. 아시아의 위기가 통상적인 IMF 케이스와는 다른데도 예산삭감, 고금리, 금융긴축이라는 표준적인 처방만을 내놓았다. 아시아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것은 취약한 금융기관의 갑작스런 폐쇄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의 주요은행들은 여신업무를 중단했으며 많은 건실한 기업들이 파산상태로 가고 있다. IMF처방은 금융공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기대와는 달리 고금리가 해외자본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개혁의 장·단기적 필요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한국의 장기적 목표는 금융구조를 개선,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도록 개혁하는 것이다. 단기적 목표는 은행의 신용공급중단에 따른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본원통화 8% 증가목표는 완화되어야 하며 금리도 낮추어야 한다. 낮은 이자율이 원화를 평가절하할 것이나 환율 붕괴의 진짜 원인은 돈이 넘쳐나서가 아니라 한국의 채무불이행과 경제 붕괴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는 것이다.

## 2) IMF 擁護論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IMF 처방을 둘러싼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에 IMF의 대주주인 미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견해로는 지난 1998년 2월 4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행한 재무차관 로렌스 서머스(Summers(1998))의 증언을 들 수 있다.

그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장기화는 1) 미국 수출과 일자리의 위협, 평가절하와 자유무역의 저해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고, 2) 미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3) 미 국

가안보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시아 위기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 위기 해결의 주된 책임은 그들 국가 자신과 그들 국가가 취하는 정책에 달려 있다.

둘째, 국제사회는 이들 국가가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조건부 금융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위기 이후에 주요 선진국(특히 일본)과 아시아 경제는 信認度(market confidence)와 성장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더 이상의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조성함으로써 단지 현재 위기뿐만 아니라 미래 국제금융체제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행동하여야 한다.

그는 아시아 각국이 취해야 할 개혁정책으로 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감독 및 투명성의 향상, 민관유착의 제거, 대내자본시장의 개방 등을 통한 국내 금융체제의 강화, ② 상품 독점을 깨고 대외경쟁으로부터 보호되는 부문을 개방하기 위한 구조 개혁, ③ 적절한 통화·금융정책의 회복, 안정적이고 투명한 정책률에 대한 장기적 합의 등을 들고 있다.

그는 IMF가 이들 국가에 대해 너무 과도한 긴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호하고 있다. IMF 프로그램은 우선 시장의 파괴 및 통화가치의 추락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수요의 위축을 막는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어려운 목적 사이에 균형을 잡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衡平性 있는 成長으로의 復歸(equitable return to growth)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국민 보건, 교육, 사회보장, 고용 보험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실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IMF가 해당 정부의 사정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전면적인 개혁을 강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상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해당국가의 정책당국자 발의로 시작된 것이고 그들 중 다수는 장기적인 개혁을 수행할 기회로 환영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4. 結論 및 韓國經濟에의 示唆

다음 <表 1>은 위에서 살핀 세 가지 경제위기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우선 성장률을 보면 러시아의 경우가 침체의 강도와 기간 면에서 제일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을 보면 미국은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 반면 러시아의

〈表 1〉 3大 經濟危機의 主要 巨視經濟指標 比較

(단위: %)

|                        | 미 국  |       | 러시아  |        | 한 국  | 인도네시아 |
|------------------------|------|-------|------|--------|------|-------|
| 성장률                    | 1929 | 6.7   | 1992 | -14.5  | 5.1  | 6.5   |
|                        | 1930 | -9.9  | 1993 | -8.7   | 5.8  | 6.5   |
|                        | 1931 | -7.7  | 1994 | -12.6  | 8.6  | 7.5   |
|                        | 1932 | -14.8 | 1995 | -4.1   | 8.9  | 8.2   |
|                        | 1933 | -1.9  | 1996 | -4.9   | 7.1  | 8.0   |
|                        | 1934 | 9.0   | 1997 | 0.4    | 5.5  | 5.0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1929 | 9.5   | 1992 | 2525.2 | 6.2  | 7.6   |
|                        | 1930 | -18.4 | 1993 | 847.2  | 4.8  | 9.6   |
|                        | 1931 | -8.8  | 1994 | 223.6  | 6.2  | 8.5   |
|                        | 1932 | -10.3 | 1995 | 131.4  | 4.5  | 9.4   |
|                        | 1933 | -5.1  | 1996 | 21.8   | 5.0  | 8.0   |
|                        | 1934 | 3.4   | 1997 | 11.0   | 4.4  | 11.0  |
| 경상수지/GDP <sup>1)</sup> | 1929 | 1.1   | 1992 | -2.3   | -1.7 | -2.5  |
|                        | 1930 | 1.1   | 1993 | 1.1    | -0.2 | -0.8  |
|                        | 1931 | 0.7   | 1994 | 3.9    | -1.5 | -1.5  |
|                        | 1932 | 0.7   | 1995 | 2.8    | -1.9 | -4.3  |
|                        | 1933 | 0.6   | 1996 | 2.6    | -4.9 | -3.4  |
|                        | 1934 | 0.9   | 1997 | 0.5    | -2.1 | -1.2  |
| 재정수지/GDP               | 1929 | 0.7   | 1992 | -18.8  | -0.5 | -0.4  |
|                        | 1930 | 0.8   | 1993 | -7.6   | 0.6  | 0.6   |
|                        | 1931 | -0.6  | 1994 | -9.9   | 0.3  | 1.0   |
|                        | 1932 | -4.7  | 1995 | -5.7   | 0.3  | 2.3   |
|                        | 1933 | -4.7  | 1996 | -      | -0.1 | 1.2   |
|                        | 1934 | -5.6  | 1997 | -      | -    | -     |

註: 1) 미국의 자료는 국제수지/GNP이다.

資料: 미국은 한국경제연구원(1998), 러시아는 Plan Econ(1998), 재정수지는 EBRD(1996), 한국, 인도네시아는 IMF(1998), 김원호 외(1998), WEFA(1998).

경우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인 점에서 대조적이다. 경상수지면에서 볼 때 미국과 러시아는 별 문제가 없었던 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적자폭이 확대되는 것이 완연하다. 끝으로 재정수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큰 문제가 없는 반면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적자기조를 지속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아시아의 위기는 적어도 거시지표상으로는 경상수지 등 대외부문에서의 문제가 주요인

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체제동학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이론·사상 측면에서 보면 대공황은 기존의 신고전파 경제학의 틀을 깨는 케인즈 경제학의 등장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있어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와 독점자본주의 단계를 이어 修正資本主義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다.

이행기 경제의 체제전환은 사상·이념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간의 체제경쟁의 결과라는 의미를 가진다. 구 소련의 붕괴로 대표되는 현실사회주의 실패를 사회주의 이념의 실패로 보느냐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다[박제훈(1997)]. 그러나 적어도 현실적으로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의 體制失敗(system failure)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를 계기로 자유시장경제의 체제비교우위를 강조하는 소위 新自由主義의 경향이 득세하게 된다. 이들 이행기 경제의 체제전환정책의 입안과 실행 과정에서도 러시아나 폴란드 등이 적어도 초기에는 충격요법이나 빅뱅 등의 급진경제개혁안을 추진했던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보다는 시장을 더 신뢰하는 신자유주의적 색채가 농후하게 드러나게 된다.

한편 작금의 아시아 경제위기의 경우 이론·사상 측면에서는 양면성이 있다. 즉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 WTO의 출범을 계기로 경제의 개방화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는 이행기 경제의 체제전환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결책도 정부규제 철폐 등 국내개혁의 차원에서 찾는다. 그에 반해 다른 한편으로는 무모한 시장개방과 시장에 대한 맹신 등이 원인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케인지안과 정치경제학자들로부터 제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금번의 아시아 경제위기는 경제학계의 반성을 촉구하는 기회가 되면서 동시에 어떤 경제학 이론이나 사상도 주류경제학의 위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문화론, 신자유주의, 통화주의, 케인즈주의 및 정치경제학 등 모든 주요 경제학 사상이 각각 새로운 자기자리 찾기를 위한 百家爭鳴의 기회가 되기도 할 전망이다.

정책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교가 가능하다. 우선 대공황의 경우는 수요창출을 위한 재정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반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보호주의가 강화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불황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행기 경제의 경우는 변화가 보다 광범위하여 가히 革命的이라 할 수 있다. 이념의 변화 뿐만 아니라 소련의 경우(또한 체코슬로바키아나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도 그러하다)는 연방해체에 따른 새로운 國家建設(nation building)의 과제까지도 안게 되었다는 면에서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정치적 과제를 포함한다는 면에서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던 대공황 시대의 미국과 다르다. 구체정책에 있어서는 소유구조의 변화를 의도한 사유화와 가격기능의 복원을 추구한 자유화·안정화 정책이 그 골격이 된다. 이행기 경제도 대부분 IMF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나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아시아의 경우는 위기의 성격이 외환위기에서 금융위기로 발전한다는 면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앞의 두 가지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IMF의 지원과 권고가 개혁정책의 골격을 구성한다는 면에서 정책결정에 있어 대외적 요인의 중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책면의 비교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도하면 우선 정책의 주체면에서 대공황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수요창출 노력의 필요성이 확인된 계기가 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행기 경제의 경우에는 개혁초기에는 정부 역할보다는 시장기능에 대한 믿음이 앞섰으나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적절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는 아직 시장과 정부 사이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진하다. 특히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극단적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발전 단계와 문화적 차이가 시장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각이 논자에 따라 아직 차이가 크다.

정책의 順序(sequence)면에서는 우선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政治와 經濟發展의 순서 및 상관관계이다. 대공황의 경우는 비교적 안정된 민주주의적 정치제도하에서 경제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물론 미국의 경우도 대공황을 계기로 노조의 역할 강화 등 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며 경제정책보다는 2차 대전에 의해서 불황을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기는 하다. 이행기 경제의 경우에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훨씬 복잡하다. 러시아의 경우는 엘친의 정치적 입지가 확고했던 집권 초기에 보수파가 장악한 의회를 해산하지 못한 것이 계속 개혁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결국 유흥사태를 야기하면서 의회가 해산되는 진통을 겪게 된다. 아시아는 나라마다 상황의 차이가 많으나 일본을 포함하여 아

직 정치적 민주화가 경제에 비해 후진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같은 경우는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정치적 민주화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소련의 예를 들어 주장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나 싱가포르 이광요 전총리 같은 이들은 아시아의 특수성을 들어 서방식 민주화를 아시아에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일정단계가 지나면 적절한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지속적 경제성장은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어렵다는 논리가 보다 설득력을 확보해 가는 것 같다. 정책 순서와 관련하여 다른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위기의 多回性 또는 深化性이다. 위기는 처음에는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덜 심각하게 온다. 그러나 그 위기에 對症療法식으로 적당히 대처하면 다음에는 심각한 위기가 오며 이 때에는 그야말로 혁명적 조치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된다. 대공황의 경우에도 처음 1929년에 증시 붕괴 사태 이후 후버 행정부의 안이한 사태인식과 미온적이고 잘못된 조치가 결국 경제를 공황까지 몰고 간 면이 크다. 이행기의 경우도 소련 말기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실패가 결국 소연방의 해체와 공산권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면이 크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 1997년말의 외환위기를 넘기면서 정작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는 지금 시점에서 정부와 일반국민의 위기의식이 약해지는 감이 있다. 금융과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외환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으며 그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한 경제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책의 방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공황의 경우에는 결국 수정자본주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시대의 러시아가 취했던 사회주의라는 혁명적 방식이나 나찌 독일의 극우적 방식보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틀 내에서의 개혁을 추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이행기 경제의 경우에는 전후 경쟁하던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수정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결국 후자의 승리로 귀결이 나면서 개혁 또는 이행은 대체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전면적 이행을 그 방향으로 하게 된다. 물론 중국처럼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중국식 사회주의로서 '제3의 길'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아시아의 경우는 아직 그 목표가 뚜렷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의 위기가 아시아 전반의 서구식 자본주의로의 전환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주기적 공황가능성이라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점을 다시 인식시키는 기회가 될지 또는 아시아적 특수성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대공황과 금번의 아시아 위기는 이행기 경제의 체제전환과 같이 기존체제의 전면적 변화보다는 대체로 소위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 이하 PS)를 요구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PS는 적어도 외형적 정치·경제 체제의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도 질적인 면에서의 획기적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체제전환과 PS의 차이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우선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初期條件(initial conditions)에 있어서 체제전환의 경우는 기존체제의 실패가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나 과제의 판별이 용이하다. 반면 PS의 경우는 대부분 초기조건이 실패보다는 성공으로 특징지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인식이 훨씬 난해하다. 이론과 학설면에서 보면 체제전환의 경우는 이미 상당기간 理論化(theorizing)의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몇 가지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사회주의 등 折衷型 체제나 제3의 길은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든가 구체적 정책실행에 있어 각국의 특수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든지, 사유화는 경제정책으로서의 의미 이외에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하다든가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반면 PS의 경우는 아직 논의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경제학 전반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수반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책의 기본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PS의 경우가 변화의 당위성과 방향성을 잡기에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오히려 한국보다 경제성고가 나쁘지 않으며 그간의 성과가 컸다는 면에서 PS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작은 것도 한 예가 된다.

이상의 논의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공황기 뉴딜 정책의 우리나라의 직접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의 평가는 조금 비판적인 것 같다(한국개발연구원(1998)). 공공투자 등을 통한 총수요의 확대보다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우리나라 현실업사태의 특징은 중장년층의 화이트칼라 계층의 실업이 증가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투자확대는 실업감소에 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적자 재정 기초의 고착화만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재정적자가 적으며 또한 지나친 고금리는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 및 재정 부문에서의 신속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행기 경제 경험의 우리나라에의 직접 적용가능성은 IMF 권고의 오류가능성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의 어려움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정책면에서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개혁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초기에 정부나 정책당국자의 확고한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 개혁은 주체세력의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개혁정책은 팀워크가 중요하다. 개혁의 의지와 강도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는 일관되게



나가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남이 희생하기만을 바라면서 자기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기득권층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특히 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기대감이 클 때 그리고 집권세력의 정치적 힘이 강한 개혁초기에 어려운 개혁과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어려운 개혁과제의 수행시 최고권력자(대통령)를 대신해서 방패막이가 되어 줄 희생양(러시아의 가이다르 같은 인물)도 필요하다.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전망은 경제학 사상이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우선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아시아적 가치를 앞으로 아시아의 계속적 번영을 가져올 원동력으로 평가하는 소위 문화론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들은 비록 현재 아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21세기의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대안도 아시아 通貨基金(AMF) 등 아시아의 단결을 통해 서구의 금융자본에 대항하자는 것이 골자가 된다. 신자유주의적인 주류경제학에서는 아시아의 미래를 조건부로 낙관하고 있다. 즉 IMF가 요구하는 대로 아시아의 경제체제를 보다 개방적이고 서방식으로 바꿀 경우 아시아 경제는 곧 다시 건강해 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경우 미국 등 서방의 주도하에서의 경제발전일 뿐으로 아시아의 특수성보다는 세계경제의 보편성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전자와 다르다. 여기서는 금변의 위기를 그동안 국내의 기득권층의 반발로 실행치 못한 구조조정 등 제반개혁을 이룰 수 있는 호기로 파악한다. 다만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IMF 개혁방안, 예를 들어 IMF의 '危機金融支援 메카니즘'(Emergency Financing Mechanism: EFM) 등이 검토된다(Summers(1998)). 케인지안적인 주류경제학은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의 경우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동 체제가 가지는 내재적 모순점 즉 시장의 작동 결과에 따른 독과점 형성 및 소득분배의 불균등과 경기변동에 따른 공황의 가능성 등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시아만의 노력으로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 어렵게 된다. 이 시각에서는 금융기관 감독이나 외환관리 등 그 동안의 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점을 일소하고 실업이나 불황 극복을 위한 정부역할의 효율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대외적으로는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활동에 대한 견제와 제어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끝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정치경제학 또는 전통 좌파 경제학에서는 금변의 아시아 위기를 현대 세계자본주의 위기의 시작으로 해석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아시아는 미국의 투기적 금융자본으로 대표되는 현대 세계자본의 이윤극대화논리에 희생된 것이며 중국에는 미국 등 서방 선진국마저 그 제물이 됨으로써 자본주의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

〈表 2〉 3大 經濟危機의 比較 要約

|       | 이론·사상         | 정 책                           | 성과(아시아는 전망)      |
|-------|---------------|-------------------------------|------------------|
| 대공황   | 케인지안          | 팽창재정정책                        | 고전자본주의의 수정       |
| 체제전환  | 신자유주의         | 긴축통화정책<br>사유화정책               | 자본주의의 지구화        |
| 아시아위기 | 문화론           | 아시아발전모델·독자모델                  | 낙관               |
|       | 신자유주의         | 규제철폐·대외개방·구조조정                | 조건부 낙관           |
|       | 케인지안<br>정치경제학 | 감독기능강화·신국제금융시스템구축<br>제3의 체제대안 | 상대적 비판<br>절대적 비판 |

기서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대신할 현실성 있는 대안체제의 제시가 핵심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위기가 이들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호기가 됨으로써 제도약의 발판으로 작용할지 또는 세계대공황의 전조가 될런지는 여러 요인의 작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중요한 현실적 변수는 미국 경제의 앞날이다.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미국내에서는 아직은 낙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등에서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sup>(12)</sup> 사회주의권의 붕괴의 교훈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무오류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때 비판론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극단적 비판론은 무대책을 낳을 수 있다. 미국경제의 최근의 경쟁력 회복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구조조정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여러 이론·사상에 입각한 다양한 시각과 견해에 귀기울이면서 모든 경우에 대비하는 냉정한 현실인식하에 세계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의 현실·조건을 고려한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의 정립 노력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사실이다.

(12)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위험은 일본의 경제침체나 아시아 금융위기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금융거품은 심각한 경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며, 거품현상이 심화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이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째로 거품이 불시에 붕괴할 경우, 금융 불안정 및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로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이 경제 전반에 확산될 경우, 과잉투자 및 과소비 초래 → 소비자 물가 상승 → 경기과열 → 연준리 시장개입 → 경기침체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거품경제의 징후는 증시 과열, 합병 붐, 부동산가격 상승, 통화공급량 급증 등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Economist, April 18th-24th, 1998).

仁川大學校 貿易學科 副教授  
 402-749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77  
 전화: (032)770-8526  
 팩시: (032)770-8146

### 參 考 文 獻

- 김수행 (1998): 『21세기 정치경제학』, 새날.
- 김수행 · 김진엽 역 (1994): 『금융자본』, 새날.
- 김원호 외 (1998): 『IMF 구제금융사례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제훈 (1992): 『독립국가의 출범과 한·소 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1993a):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협력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1993b): 『CIS 역내 교역 및 금융관계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1994): “이행기 경제의 체제전환 비교모델”, 『지역경제』, 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0-86.
- \_\_\_\_\_ (1997): “사회주의 존속가능한가? — 21세기 대안체제구축을 위한 일구상,” 『비교경제연구』, 5, 3-27.
- 부즈 앨런 & 해밀턴 (1997): 『한국보고서』, 매일경제신문사.
- 유석춘 (1997): “동아시아 ‘유교자본주의’ 재해석,” 『전통과 현대』, 겨울, 124-146.
- 양동휴 (1994): 『미국경제사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구한 (1993): 『이야기 미국사』, 청아출판사.
- 이성섭 (1998): 『IMF외환위기의 원인규명과 정책적 교훈』, 경제정의실천연합회.
- 이찬근 (1998): 『투기자본과 미국의 패권』, 연구사.
- 이 풍 (1997): “제3의 길은 가능한가?,” 『비교경제연구』, 5.
- 한국개발연구원 (1998):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 함재봉 (1997): “경제제민과 한국자본주의,” 『전통과 현대』, 겨울, 16-35.
- Aslund, Anders (1995): *How Russia Became a Market Economy*, The Brookings Institution.
- Bleaney, M. (1976): *Underconsumption Theories: A History and Critical Analysis*, Lawrence & Wishart.
- EBRD (1995): *Transition Report 1995*, London.

Economist, April 18th-24th, 1998.

Feldstein, Martin(1998): “Refocusing the IMF,” *Foreign Affairs*, March/April.

Fukuyama, Francis(1995): *Trust*, The Free Press., N.Y..

\_\_\_\_\_ (1997): “The Illusion of Exceptionalism,” *Journal of Democracy*, July.

IMF(1998):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Washington, D.C..

Galbraith, John Kenneth(1994): *The World Economy Since The Wars*, Mandarin.

Krugman, Paul(1994a):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11-12.

\_\_\_\_\_ (1994b): *Peddling Prosperity*, W.W. Norton & Company, Inc.; 김이수 · 오승훈 역 (1997), 『폴크루그만의 경제학의 향연』, 부키.

\_\_\_\_\_ (1997): “First: What Ever Happened to the Asian Miracle?,” *Fortune*, August 18, 26-28.

\_\_\_\_\_ (1998): “What Happened to Asia?,” *DISINTEL*, January.

Plan Econ(1998): *Plan Econ Review and Outlook for the Former Soviet Republics*, May.

Luxemburg, Rosa(1913): *The Accumulation of Capital*, Routledge & Kegan Paul.

Noren, James H.(1992): “The Russian Economic Reform: Progress and Prospects,” *Soviet Economy*, 1992. 8. 1, 3-41.

Przeworski, Adam(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binson, Joan(1950): “Marx and Keynes,” *Collected Economic Papers I*, Oxford, Blackwell.

Roubini, Nouriel(1998): “Asian Crisis: An Interview with Nouriel Roubini,” *Economic Guidé*, April 15.

Sachs, Jeffrey(1997): “IMF Is a Power unto Itself,” *Financial Times*, December 11; 조선일보, 1998. 1. 3.

Summers, Lawrence(1998): Deputy Secretary Summers Testimony on Asian Financial Crisis, Feb. 4, 1998, USIS.

Toffler, Alvin(1980): *The Third Way*; 이규행 감역 (1995), 『제3물결 (The Third Way)』, 한국경제신문사.

WEFA(1998): *Asian Monthly Monitor*, January.